

## 세계시민교육과 시민단체의 역할\*

김 민 호\*\*

### 〈목 차〉

- I. 서 론
- II. 시민교육의 개념
- III. 우리 나라 시민교육의 변천 : 국민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 IV. 시민교육의 연장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대두
- V. 세계시민교육의 문화적 성격
- VI.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 VII. 결 론
- \* 참고문헌

### I. 서 론

2002년 월드컵 경기가 무더위와 함께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달구고 방송매체를 통해 지구 전체로 중계되면서 세계는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은 새로운 천년기를 맞아 과거 식민국이었던 일본과 괴식민국이었던 한국이 공동 주최하는 만큼, 지난 세월 식민지배과정 속에서 서로 원수가 되었던 나라간에 혹은 전쟁으로 서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갔던 나라들간에 축구 경기를 통해 구원(舊怨)을 털어버리고

\* 이 글은 2002년 6월 21일~22일 제주국제협의회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세계 시민교육>이란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주국제협의회 제14회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했던 것을 수정·보완 한 것이다.

\*\* 제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평화의 축제로 승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뜻 있는 월드컵 경기 이면에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는 제3세계 어린이들의 피폐한 삶이 놓여 있다. 인도의 최하층 달릿(불가촉천민) 계층의 아동 대부분은 5~6세 때부터 노동을 하고 있으며 월드컵에 사용하는 축구공을 만드는 아이들만 2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 절반 가량의 아동은 노동과 함께 약간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절반은 하루종일 축구공 만드는 일에 매달린다. 50달러 이상에 팔리는 축구공 한 개를 만들어 이들이 받는 돈은 고작 100~150원 정도고 하루 12시간 일해도 2,000원 이상을 벌지 못한다. 게다가 작업환경이 열악해 아이들은 수도 없이 바늘에 찔리고 시력도 나빠져 실명하는 사례까지 있다(사이버 참여연대, 2002. 5. 28 : 5. 29 : 6. 3).

한편 우리나라가 폴란드와 경기를 벌였던 뒷날, 거의 모든 신문과 방송이 한국의 승리를 자축하고 16강 진출의 꿈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 날이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30주년이 되는 날임을 기억하고 '하나뿐인 지구'의 환경을 걱정하고 '지구에 복원의 기회를 주자'고 말하지 못했다. 이미 1980년대 후반의 조사에 의하면 이뉴이트족(에스키모인) 체내에 축적된 PCB(폴리염화비페닐)와 DDT 등이 온대지방 사람들보다 10~20배 가량 높았는데, 멀리 열대 또는 온대 지역에서 방출된 화학물질이 바다를 타고 북극지역까지 이동, 에스키모인의 전통적인 식량인 해양포유동물의 몸을 거쳐 인체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란다. 화학물질이 생산, 소비되는 곳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모유수유조차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다(평화신문 2002. 6. 9).

이처럼 우리는 지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아동이 만든 축구공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를 치렀고, 그 경기를 인공위성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으며, 월드컵 경기 또는 다른 일과 관련해 우리가 생산, 배출한 화학물질이 에스키모인의 몸에 알게 모르게 축적되는 이른바 '세계화' 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 삶 속에서 이를 잊고 지낼 때가 많다. 국가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자기 정체성을 세계시민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연고주의와 돈 선거를 벗어나 정책선거를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여 외쳐대지만, 정작 투표장에 가서는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 손끝이 움직이는 전통적 생활방식을 아직까지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높은 교육열과 고등교육이 팽창에도 불구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오랜 냉전적 억압과 군

사독재를 거친 한국에서는 시민의 사회참여, 정치참여의 기회는 극도로 억제되어 왔고, 시민들은 신민(臣民)적 태도를 내면화해” “소극적, 자기중심적, 비참여적 태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사회의 기본가치에 헌신하고 민주주의의 제반 과정과 절차에 익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김동준, 2000:160).

이 글은 시민성이라는 근대사회의 과제는 물론이고 세계시민성이라는 탈근대사회의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사회 현실 속에서 무엇을 더 배워야 할지, 또 이 같은 시민 및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시민단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앞서 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및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 II. 시민교육의 개념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자질 곧 시민성을 기르는 계획과 실천활동을 가리킨다. 이 때 시민성이란 개인을 사회공동체의 성원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의 제도로서 시민사회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이종렬, 1998 : 1741~1745).

시민사회는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 혹은 전체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자연상태와는 반대의 의미를 지닌 문명화된(civilized) 사회 혹은 헌법에 기초해서 지배가 이루어지는 입헌국가를 가리켰다. 말하자면 시민사회를 국가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하고 있었다(신광영, 1995 : 83~84).

그러다 점차 시민사회를 국가와 분리된 실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인민에 대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정당하게 독점할 수 있는 강제적 조직”으로, 반면에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생활영역 곧 가정생활, 경제영역, 문화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으로 이해했다. 국가가 다른 사회조직과 달리 “보편적 회원제와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가가 아닌 모든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 셈이다(임혁백, 1993 : 79~80).

하지만 시민사회를 국가와 분리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치사상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오문환, 1999). 먼저 로크(Locke), 루소(Rousseau) 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지배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해방적 성격을

강조했다. 즉 절대왕정에 대해 어떤 억압도 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의식과 합리성, 자유와 권리, 법과 주권 등을 실현하는 이상사회를 형성코자 했다. 한편 초기 계약론자들과 달리 토크빌(Tocqueville)은 법의 이름으로 세련화된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견제장치로서 시민사회를 요구했다. 그는 국가권력이 주권자인 인민의 복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생활에서 중요한 것 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여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무튼 자유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경제적 자유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권력관을 시민社会의 핵심으로 이해하였다.

시민사회를 국가에서 분리하되, 시민사회를 이상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자 하는 정치사상들이 있다. 헤겔(Hegel)에 의하면 시민사회는 이기적 개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체계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자의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위험을 갖는다. 진정한 정치공동체는 이기적 욕망체계인 시민사회의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중립적이며 공적 권위인 국가가 요구된다. 공정한 군주, 관료제, 귀족에 의해 운영되는 입헌국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마르크스(Marx)는 시민사회의 보편적 이기주의를 국가라는 타자보다는 시민사회 내적 존재인 프롤레타리아트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주된 계급인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므로, 시민사회 안에서 형성되었으면서도 계급적 이해에서 초연하고 경제적 욕망에서 해방된 무산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가 역사진보와 사회발전을 주도하는 도덕과 윤리의 화신으로 자리 잡는다.

자유주의자와 헤겔과 마르크스는 시민社会의 정치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을 각각 분명하게 드러냈다. 시민사회를 각각 정치나 경제로 환원하여 설명하려 했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를 사회문화의 재생산 구조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던 정치사상들이 있다. 시민사회를 칼이나 화폐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또 다른 자율성의 영역으로 파악한다. 그람시(Gramsci)는 종래 국가-시민社会의 이분 모델과 달리 국가라는 상부구조와 생산양식이라는 하부구조 외에 또 다른 사회문화 영역으로 시민사회를 상정하는 삼분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서구사회에서 부르주아 지배가 지속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억압만도, 부르주아에 의한 생산양식 때문만도 아닌 사회적 헤게모니(Hegemony)에 의한 노동자들 자신의 자발적 동의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헤게모니 형성에는 교회, 노동조합, 학교뿐만 아니라 언론, 도서관, 서클, 클럽, 건축, 거리시설 및 이름 등 일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관여한다. 그람시

에 의하면 혁명은 단지 부르주아나 국가의 강권구조를 무너뜨리는 '기동전' 만이 아니라 정교하고 복잡하게 짜여진 헤게모니 구조를 전복하는 '진지전'을 수반해야 실현 가능하다.

또한 하버마스(Habermas)에 의하면 국가와 자본은 국민통제와 이윤축적을 목적으로 형성된 '체계'로서 기능적 합리성 또는 도구적 합리성의 논리를 따른다. 반면에 '생활세계' (Lebenswelt)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왜곡 없는 자연스런 의사소통을 추구한다. 그에 의하면 근대 서구의 시민사회의 전통은 바로 생활세계(혹은 공공영역)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자유주의자의 합리적 개인들과 달리, 사회의식화된 독서층이 등장해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생활세계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면서 곧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전개되면서 서구의 공공영역이 변형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에 의하면 오늘날 서구 시민社会의 최대 과제는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거나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데만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를 뒷받침하는 생활세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자유주의자들이 시민사회에 부여했던 이상주의적 측면을 재조명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에게 부여했던 거점을 생활세계에 부여함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의 이상적 시민社会의 지평을 넘어서고자 했다.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를 하버마스의 주장을 따라 사회 의식 또는 공적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인 공적 영역(*Öffentlichkeit*)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곧 국가나 경제영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인간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사회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세계로서 다양한 가치들이 사회적 강제에 의해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출되는 다원적 사회이다. 따라서 이런 시민사회에서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동시에 공적 관점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민성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단체들이 필수적이며 이들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 III. 우리 나라 시민교육의 변천 : 국민교육에서 시민교육으로

우리 나라에서 엄밀한 의미의 시민교육은 시민사회의 출현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잡을 것인지는 분석시각에 따라 시기상 특징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양기호, 1999). 어떤 이는 봉건제의 해체와 자본주의 발전의 맹아가 나타난 17, 18세기까지 추적해 올라가고, 경영형 부농의 출현과 원시적 상업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어, 갑오농민전쟁에 이르러 자율적 민의 공간이 확립되었다고 평가한다. 또 어떤 이는 봉건제도의 철폐와 자본주의의 성립과 발달이 주로 외세에 의해 파행적으로 진행된 1910년대에 외세의 정치적 지배에 항거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따면서 표출되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미 군정기에 민주주의의 외적 이식을 통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이후 계속되는 독재체제에 저항하면서 성장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찌되었든 우리 나라의 시민사회의 맹아는 서구적 경로와 달리 식민지적·신식민지적 조건, 그리고 분단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외세와 외세 의존적 국가권력의 영향 아래서 주로 '바깥에서 안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교육 역시 상당 기간 동안 형식상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해방 이후 한동안 우리의 시민교육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통합성과 충성심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해 왔을 뿐 시민의 주체적 자각, 비판적 안목 형성과는 무관하게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도덕, 국민윤리, 사회 과목 등을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데 치중했고, 정권의 논리를 주입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함양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학생들을 민주시민<sup>1)</sup>으로 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학교밖에서도 민주시민 육성은 미미했다. 군대, 예비군, 민방위대 등은 국가관 함양 교육에 주력했고, 반공연맹, 새마을운동본부 등의 관변단체 역시 정부의 위탁을 받아 각종 반공교육과 주민교육을 실시했다. 요컨대 '국민교육' (nation building)에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

---

1) 미국의 사회과학 교육 연합(the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은 민주시민을 1) 의견을 갖춘 사람 2) 민주주의적 가치에 헌신하는 사람 3) 자유 사회의 제반 과정과 절차에 숙달된 사람 4)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책무를 느끼고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 등으로 정의한다(김동춘, 2000 : 160에서 재인용).

그러나 1960, 70년대의 급속한 자본주의화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 형성의 조건을 제공했으며, 국가 지배의 비민주성과 정당성의 취약함은 시민사회 민주세력의 활성화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가져왔고, 1980년대에 더욱 가속화되었다(정태석·김호기·유팔무, 1995). 국가는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면서도 시민사회를 철저히 근절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시민사회의 주체들을 육성시켜 왔다. 즉 권력 정당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생존권을 지키려는 노동자, 자유권을 수호하려는 중산층의 성장을 초래하였다. 국가 권력의 확장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주체 즉 시민사회의 구성으로서 시민이라는 귀속감을 지니게 하는 데 공헌했다.

1970, 80년대 일부 야학에서 실시했던 의식화 교육, YMCA·여성단체·재야단체들이 정부의 탄압속에서도 실시한 각종 민족학교, 청년학교, 여성교실, 1980년대 노동자 의식화 교육,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시민단체가 추진한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여성교육, 민주주의 교육 등은 참여적 시민 형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시민교육의 전통을 근근이 이어 왔다.

1980년대에 군부정권이 해체되면서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시민사회가 분화되어 오면서 동시에 시민사회 내 문제영역이 분화되기도 했다.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극단적으로 억압을 받던 군부정권 아래서는 이에 대한 저항이 비(非)합법적 또는 반(半)합법적 형태 외에는 불가능했기에 전투적 민중운동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제6공화국의 등장에서 보듯 전투적 민중운동이 성과를 거두면서 시민사회의 공간이 확장되었고 그 결과 계급적 문제영역보다는 다(多)계급적 문제영역, 소비·생활상의 문제영역에 주요한 기반을 갖는 온건한 지향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고, 중앙수준의 문제영역에 대립하는 지방 및 지역 수준의 문제영역의 분화가 나타났다(조희연, 1995).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학교와 학교 밖 시민단체들에서 시민의 주체적 자각에 초점을 둔 시민교육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확장에 힘입은 바 크다. 초·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시민참여의 중요한 통로로서 선거 외에 시민단체의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환경교육, 협동교육 등을 강조하는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어떤 점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요한 11개 시민단체들<sup>2)</sup>은 1997년 민주시민교육포럼을 구성하여 ‘민주시민

2) 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여연대, 학부모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 사회교육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YMCA, 환경운동연합, 홍사단 등이다.

교육지원에관한법률' (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 중에 있을 정도로 정부보다는 시민단체 주도의 시민교육을 주창하고 있고, 심지어 과거 관변단체로 분류되었던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도 1990년대 후반 이후 민주시민교육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편 각 시민단체들은 부설 교육기관<sup>3)</sup>을 두어 회원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각종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IV. 시민교육의 연장으로서 세계시민교육의 대두

시민교육이 시민사회 구성원의 자질 곧 시민성을 기르는 계획과 실천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은 세계시민사회 구성원의 자질 곧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계획과 실천활동이라 할 수 있다.

탈근대성을 드러내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혁명, 냉전체제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확산, 환경·자원에너지·인권·빈곤·인구 등 상호의존적인 세계문제의 증가, 그리고 세계화 참여자의 보편화·다양화·일상화 등 이른바 세계화의 결과,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풀 수 있는 단위가 지구촌, 지역, 국민국가, 지방, 기업과 개인 등 서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중층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세계화 현상의 중층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 13~15)

둘째, 경제적·기술적 세계화에 따른 역기능을 시정하고 부정적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윤리적·규범적 차원의 세계화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자본, 금융상품, 노동의 국경 없는 이동과 자유화라는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세계경제를 국경없이 돌아다니며 막대한 부를 챙기는 투기금융자본의 '카지노 자본주의'가 출현했고 세계는 점차 20대

3) 중앙의 시민단체 중에는 경실련의 지방자치시민대학와 언론학교,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아카데미, 흥사단의 아카데미,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캠프, 청소년 아카데미의 간디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동수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자원봉사학교,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전국귀농운동본부의 귀농학교 등이 있다. 제주지역만 보더라도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의 문예아카데미, 제주4·3연구소의 제주역사문화교실,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아파트시민학교, 어린이오름학교, 제주역사문화바로알기모임 등이 있다.

80의 비율로 부와 빈곤의 차별적 분배가 구조화되고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역, 종교와 문화의 벽을 넘어 세계적 권력과 자본의 힘에 맞서는 세계적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형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 의사소통과 담론의 형성, 토론 후 합의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이삼열, 2000 : 17~33).

셋째, 우리 나라의 모든 문제를 세계적 시각에서 생각하는 태도와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는 총체적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또 국제사회 속의 한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를 세계화하고 한국의 모든 부분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의식태도, 행동양식,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필요하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96 : 16~19).

사실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을 이제까지 ‘국제이해교육’이란 이름 아래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러나 국가간 평화유지, 상호의존, 협력 등의 덕목에만 관심 기울였고 국가간의 경쟁이란 현실 인식에는 소홀했다. 강압적인 소수의 국가 권력이나 세계화한 자본의 횡포로부터 힘없는 다수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을 지녔던 것도 아니었다. 그 결과 상호의존의 불균형, 불평등 구조 속의 경쟁·마찰·알력 등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우리 나라의 특수상황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고 한국문화의 세계화, 한국사회의 세계화라는 차원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못했다.

## V. 세계시민교육의 문화적 성격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시민성을 문화적 다양성(The Millennium Forum of the United Nations, 2000)과 관련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견고한 단일화 모형(the hard uniformising model)에 따른 세계시민교육이다. 이 모형은 오늘날 서양의 시민성을 나머지 다른 문화권이 추구해야 할만큼 인류 발전의 절정임을 상정한다. 따라서 서양의 시민성을 중심으로 단일한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관점은 식민지 팽창기부터 냉전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이란 오늘날 서양 문화가 창출한 문명적 잣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 문화간 문화 교류를 상정할 수 없고 단지 서양의 시민성만이 세계시민교육에서 '자기 소리' (voice)와 '자기 선택권' (vote)을 가질 뿐이다.

둘째, 다원적 보편화 모형(the plural universal model)에 따른 세계시민교육이다. 이 모형은 세계 모든 문화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나, 모든 문화가 자유시장 경제, 개인의 인권, 대의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등 구미 문명의 보편적 가치 속에 통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가치에 적응하지 않는 문화는 외고집의 전체주의적 문화로 간주한다. 문화간 대화는 보편적 가치의 확보 다음의 일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시민사회에서는 문화적 교류가 이뤄지지만, 세계시민교육에서 오늘날 서양문화가 만들어 놓은 시민성을 세계 시민성으로 받아들어야 하는 비균형적 성격을 띤다. 결국 모든 문화가 '자기 소리'는 가지고 있으나 '자기 선택권'이 없다.

셋째, 다원주의 모형(the pluralist model)에 따른 세계시민교육이다. 이 모형은 모든 문화에는 다른 문화로 환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제도, 실천 등이 있음을 인정한다. 문화간 교류도 미리 결정된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 시민성이란 특정한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사회의식화된 독서층이 세계적 차원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그것으로 세계 시민성을 갖추었다고 간주한다. 이 모형의 세계시민교육에서는 지구촌 차원의 공적 문제를 다루되 모든 문화가 '자기 소리'와 '자기 선택권'을 갖음을 전제로 다양한 문화와 문명 속에서 균형적 교류와 소통을 이룬다.

이처럼 세계시민교육이란 이중적 실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이다. 한편에선 국가 간 의사소통과 교류의 증대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날 서양문화의 이식이라는 문화적 동질화의 위험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비균형적이고 불평등하며 모순적인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 다원주의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과정 및 전략 등을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지배하거나 우위에 있지 않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중심주의,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정의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들은 세계시민교육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새롭게 재구조화 하여야 한다. 셋째, 눈에 보이진 않으나 세계시민교육이 시끌 원주민들에게 미칠 실질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세계시민교육, 사회정의 및 문화적 다양성간의 관계를 토론하는 데 주변부 사회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다섯째, 자신의 고유한 역사

를 갖고 서양의 근대성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근대성(modernities)의 존재를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정책과 자원들을 확충해야 한다.

## VI.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시민단체가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내용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교육목표 : 세계시민사회의 공공성 확보

우리 나라는 많은 경우 서구 사회가 비교적 순차적으로 경험한 것을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성격은 종종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자유주의적 시민사회가 요구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헤겔과 마르크스가 제기한 극복해야 할 시민사회의 모습도 보인다. 또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인사나 지식인 영역에 관심이 증대하면서 시민사회를 문화세계로 이해하려는 시각도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다. 나아가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나 국외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의 노동자 학취 문제 등 국가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횡포에 맞서 세계시민사회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권, 자유, 권리 등은 국가의 절대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권리를 확보하는 자유주의 맥락에서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시장의 자유화 속에서 사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국내·외 자본가와 전 국민의 효율적인 감시, 관리, 통제를 목적으로 삼는 국가가 연합하여 국내·외 시민을 억압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호의 경제적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시민사회의 경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헤겔은 국가를,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역할을 중시하는 정치제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헤겔이 기대했던 국가는 이상형에 불과했고, 오히려 푸고(Foucault)나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처럼 자본가들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하

게 민중을 통제하였다. 마르크스가 기대했던 프롤레타리아트 또한 현실 사회주의의 국가들의 붕괴에서 보듯이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내포하면서 동시에 사회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버마스의 '생활 세계' 혹은 그람시가 제안한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진지전'을 우리 상황에 맞게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김민호, 1991). 이를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사회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관심을 넓히고, 이들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 도덕성과 공공성을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교육내용 : 지구적 차원에서 시민권의 실현

세계시민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권리인 자유권, 참정권, 복지권을 국내만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는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든 인류에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해손시키는 나라나 지역이 있다면 시민단체는 민간 차원에서 국제연대기구를 조직해 해당 국가나 초국적 자본 등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만연한 빈곤, 질병, 유아 사망, 환경 파괴, 인권 유린 및 전쟁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 시민사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려는 연대의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시민적 연대의식을 개발하려면, 각국에서 사회 민주화 과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는 종교인, 학생, 지식인 및 시민단체들간에 의사소통망을 구축하고, 공론 형성을 도모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감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들의 힘을 길러야 할 것이다.

## 3. 교육방법 I : 시민단체 주도의 비형식적 교육

앞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세계 시민사회의 공공성 확보와 지구적 차원의 시민권 실현이란 말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그러한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우선 시민단체는 활동가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시민단체 회원이나 일반 시민 대상의 교육은 뒤로 미루고 우선 활동가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사회 형성에 뜻을 같이 하고 이에 헌신한 활동자를 길러내면 회원이나 시민 대상의 교육은 조만간 뒤따라 올 수 있고 그 결과 시민단체의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활동가 교육은 시민단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과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외부에서 불러오기보다는 지역 대학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교육자와 교육대상자 간에 밀도 있는 관계를 수립하고 교육의 성과를 환원하는 데 한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활동가들에게 교육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전문가와 활동가 공동으로 발제하여 토론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1999년 한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경기도 수원 및 성남지역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얻었다.

다음으로 시민단체는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학습동아리<sup>4)</sup>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동아리는 개개인의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동아리에서의 학습경험이 모임 내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들의 개인적, 집단적 삶에서 생활적용, 자원봉사, 전문성 실현 및 지역사회실천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동아리에서 학습한 것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개선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실천형 학습동아리<sup>5)</sup>는 세계시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시민단체가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세계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공부하는 학습동아리의 결성을 지원한다면 그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세계시민교육만이 아니라, 그 학습동아리의 지역사회 실천 운동의 결과로 지역주민들 역시 간접적으로 많은 교육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세계시민교

- 
- 4) 학습동아리는 스웨덴이나 미국의 스터디 서클(study circle), 호주의 학습서클(learning circle), 일본의 자주학습조직(自主學習組織)과 유사하다. 학습동아리는 일정한 인원의 성인을 운영주체로 하고, 자발성에 기초하여 결성한다. 단순히 사교나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란 두렷한 목적을 지닌다. 또 정기적인 만남을 원칙으로 한다(이지혜 외, 2001).
  - 5) 자녀교육문제를 놓고 공부하던 동아리 회원들이 그 지역의 학교촌지없애기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오랜 논의 끝에 지역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고민하다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아리도 있고, 독서지도 동아리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책을 골라 도서목록을 만들어 인근지역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또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모인 학습동아리가 지역문화가 개선되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역사회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자 각종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유치하기도 한다(이지혜 외, 2001).

육에 도움이 될만한 학습동아리를 예시해 보면, '월드컵과 아동노동' '지구온난화 현상'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외국진출 한국기업 실태' '9·11 테러와 남북통일' '제주 언어와 영어공용화' '세계의 습지와 지역개발'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세계시민교육은 성인교육의 원리(andragogy)에 비추어 그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되, 단지 학습자의 경험을 회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체계적 지식의 도움을 받아 학습자의 경험 속에 나타난 의식을 비판적으로 반성(critical reflection)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람들은 이제껏 자신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 관심을 보여 왔고, 습관적으로 해 왔던 생활방식을 새로운 틀에서 재조명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반성적 노력을 통해 외부로부터 새로운 인식의 틀을 받아들여 자신의 인식을 재구성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구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학습은 학습자의 관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할 때 학습자 자신의 특정한 경험에 매몰돼 일회적 학습으로 끝나고 인식의 확장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경험을 매개하지 않은 이론 교육 역시 인식의 경험적 토대가 미약해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에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을 매개로 하되 체계적 지식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구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시민운동적 발상 못지 않게 성인교육적 발상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4. 교육방법 II

##### ： 무형식적 세계시민교육의 장으로서 시민단체 활동

인간의 학습활동은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만이 아니라 자연스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전개된다.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한 교육목적이 없다는 뜻이지 어떤 의도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학습자는 어떤 문제 사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지식이나 기술 및 가치관의 획득을 모색한다. 달리 말해 자연스런 사회적 상황에서의 학습은 우연적(incidental)일 뿐 전혀 의도가 없는(accidental) 것은 아니다(Brookfield, 1983 : 12~13). 이 상황에서 교육자(educational agents)는 반드시 인간의 학습을 위해 설립된 제도화된 교육기관의 교육자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든 아니면 학습의 촉진을 위해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든 의식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아동들의 소꿉놀이 장면에서 아동들은 이전에 미리 봤던 것을 선별해서 대화 내용과 상호작용을 재현하며 논다. 이 때 아동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양한 장면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부모나 마을 사람들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아동들의 놀이를 고무한다. 이처럼 학습과 교육은 아동과 부모가 일상 생활에 참여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이런 형태의 학습과 교육은 아동과 부모가 일상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과 대비시켜 무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이라 부른다.<sup>6)</sup> 이같은 무형식 교육과 학습은 지역사회 안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학교교육 출현 이전에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두어 아동에게 말과 행동을 가르쳤고, 학교교육 출현 이후에도 교사와 별개로 아동들의 학습을 감독하고 이상 생활의 행동방식을 가르치는 교복(教僕, pedagogues)을 두기도 했는데 이들의 교육은 무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서구사회에서는 교회의 성직자와 선교사들이 학교와 별개로 무형식적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길드(Guild) 조직에 의한 도제훈련 역시 무형식 교육이라 할 수 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과학과 합리적 사고의 발달과 더불어 각종 토론회, 상호향상을 위한 모임 및 찻집 등이 생겨나 무형식적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각종 사회단체,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집단적으로 상호작용(group process)하면서 무형식적 교육의 효과를 얻고 있다 (Smith, 1997).

특히 무형식 교육 및 학습에 관한 생각은 자연스런 사회적 상황, 지역사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의 전개와 함께 발달했다.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은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의 의미를 공동체적 삶 자체 안에서 발견하고자 했다. 또 국가가 제공하는 기존의 위로부터의 교육과정을 거부하고 노동자들 스스로 통제하는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했던 19세기 영국의 노동교육 운동 역시 그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정치의식을 각성시키는 무형식

6) 콤즈와 애미드(Coombs & Ahmed)는 교육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다. 첫째가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제도화되고 연령에 따라 학년을 구분한 위계적인 교육체제”인 형식 교육(formal education)이고, 둘째는 “아동과 성인집단을 위해 특별히 선별한 학습유형을 제공하는 형식 교육 범주 밖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가리키는 비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이며,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경험과 환경과의 접촉으로부터 지식, 기술, 태도 및 통찰력을 획득하는 평생동안의 과정”을 가리키는 무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이다(LaBell, 1975:21에서 재인용).

교육의 계기가 되었다. 그밖에도 사회주의자들과 반식민주의 운동가들의 정치 투쟁, 그리고 여성운동과 신식민주의적 담론 속에서도 무형식 교육을 찾아 볼 수 있다.”<sup>7)</sup>

세계시민교육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단지 학교나 시민단체가 교실수업 형태로 세계 시민의 연대와 공공성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세계시민교육이 세계시민운동과 분리된 채 진행된다면 교육적 효과는 크게 줄어들고 말 것이다. 이와 달리 보다 구체적인 정치현안과 사회단위 안에서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에 참여할 때 세계시민 교육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빈곤, 환경파괴, 인권 침해, 전쟁 등 세계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에 활동가로서든 후원회원으로서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일이 요구된다.

## VII. 결 론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교차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시민교육과 함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서구사회 의 시민성을 우리 사회에 단순 이식하는 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근대성, 다문화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장의 지배에 맞서 세계시민사회라는 생활세계의 공적 영역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 의식화된 독서층이 세계적 차원에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계시민성을 길러야 한다.

이같은 세계시민성을 형성·확산시키려면 무엇보다 세계시민사회의 공공성 제고에 관여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육성해야 한다. 그 다음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시민단체가 나서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학습하는 많

7) 파농(Fanon)에 의하면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근 일세기에 걸쳐 알제리 여성들의 베일을 벗기려 했으나 실패한 반면에, 알제리 민족해방투쟁이 시작된지 5년이 지나면서 알제리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베일을 벗어 던졌다. 왜냐하면 식민지 해방운동에 가담한 여성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데 베일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남성들과 나란히 투쟁에 참여하는 가운데 베일에 함축된 봉건적 남녀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다(김종철, 1981 : 145~147).

은 학습동아리를 조직하고 학습의 결과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세계시민교육 활동이 단지 교실수업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됨을 유의해야 한다. 교실 수업만으로는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성은 학습자가 지구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반성할 때 비로소 길러지기 때문이다.

2001년 연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사회의 세계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사회가 직면할 수 많은 사안들 - 1차산업 시장의 개방, 외국인 투자가와 노동자의 유입 증대, 환경훼손, 소비문화의 확산과 전통문화의 단절, 도덕성 쇠퇴, 빈부 격차 등 - 은 단지 제주나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말았다. 이제 제주도민 모두에게 세계시민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시민단체의 과제와 역할을 검토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교육적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무엇보다 교육을 개인적 수준에서만 접근함으로써 교육의 탈정치화를 초래했던 교육학계의 관행을 넘어서 수 있었고, 교육을 학습자의 삶과 관계없이 오직 지식의 형식에 입문시키는 일로 간주하는 전통적 교육관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교육자 중심의 교육을 시도했던 계몽적 교육관의 한계를 넘어 학습자들의 자발적·협력적 학습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가그디쉬 군다라(2000). 국제이해교육과 문화간 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엮음). **국제 이해교육 방법론**. 서울: 사람생각, 75~77.
- 김동춘(2000). 시민교육. 김동춘 외. **NG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157~205.
- 김민호(1991). Antonio Gramsci의 교육론. **제주교육대학 논문집**. 제20집, 7~19.
- \_\_\_\_\_(2000). 시민사회단체 주도 평생교육활동 법제화의 의미. **평생교육학연구**. 제6권 제1호, 263~288.
- \_\_\_\_\_(2002). 국제문화 이해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제주도교육청. 교육제주**. 제113호, 13~16.
- 김종철(1981). 식민주의의 극복과 민중. R.자하르 · 김종철(저)(1981). **프란츠 파농 연구 : 파농 이데올로기의 비판**. 서울 : 도서출판 한마당, 133~162.
- 신풍영(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필무 · 김호기(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 한울, 80~123.
- 양기호(1999).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능과 유형.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 -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서울: 법문사, 72~106.
- 오문환(1999). 시민사회의 사상 - 시민정부, 부르주아, 공공영역 - .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 -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서울: 법문사, 17~45.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96). **학교에서의 국제이해교육**.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이삼열(2000). 세계화와 세계시민적 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엮음). **국제이해교육 방법론**. 서울: 사람생각, 17~33.
- 이종렬(1998). 시민교육.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편). **교육학대백과사전 제2권**. 서울: 하우동설, 1741~1745.
- 이지혜 외(2001). 성인여성의 학습동아리 활동 시범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 정책연구과제 2001~08**.
- 임혁백(1993). 민주화 시대의 국가 - 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 국가, 시장, 민주주의. 최장집 · 임현진(공편). **시민사회의 도전 - 한국 민주화와 국가 · 자본 · 노동**. 서울: 나남, 77~106.
- 정달영(2002). 축구열병 - 병든 지구. **평화신문**. 2002. 6. 9.
- 정태석 · 김호기 · 유필무(1995). 한국의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전망. 유필무 · 김호기

(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 한울, 263~297.

조희연(1995). 민중운동과 '시민사회', '시민운동'. 유팔무 · 김호기(엮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서울 : 한울, 298~336.

한태옥(2002a). 노동자 · 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 캠페인 돌입. **사이버 참여연대. 주요이슈. 2002. 5. 28**

[http://peoplepower21.org/issue/issue/news\\_comments.php?news\\_nu...](http://peoplepower21.org/issue/issue/news_comments.php?news_nu...)

(2002b).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 "왜 월드컵이 문제인가?" 토론회. **사이버 참여연대. 주요이슈. 2002. 5. 29**

[http://peoplepower21.org/admin/issue/print\\_news.php?news\\_num=2146](http://peoplepower21.org/admin/issue/print_news.php?news_num=2146)

(2002c). '아동노동철폐' 캠페인 위해 한국 온 15세 인도소녀 소냐. **사이버 참여연대. 주요이슈. 2002. 6. 3**

[http://peoplepower21.org/admin/issue/print\\_news.php?news\\_num=2157](http://peoplepower21.org/admin/issue/print_news.php?news_num=2157)

Brookfield,S.D.(1983). **Adult learners, adult education and communit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LaBelle,T.J.(1976). **Nonformal education and social change in Latin America**. L.A.:UCLA Latin America Center Publications.

Smith,M.K.(1997). A brief history of thinking about informal education. **The encyclopedia of informal education**. [www.infed.org/thinkers/et-hist.htm](http://www.infed.org/thinkers/et-hist.htm)

The Millennium Forum of the United Nations(2000). **Cultural Diversity and Globalisation**.

<http://www.barcelona2004.org/servicer/global.nsf/public/discussio-eng>